산업대학 지원정책의 회고와 과제

이 진 설
서울산업대 총장

Ⅰ. 머리말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열린교육체제와 평생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교육 현실을 개혁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현 시점을 문명사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파악하고, 기존의 교육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찍이 산업대학은 당시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1982년 '개방대학'이라는 명칭으로 평생교육과 계속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산업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기능인력 수준의 산업체 근무자들에게 평생교육 또는 재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고, 전문대학 졸업자들과 실업계고교 출신자들에게도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립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즉 학술중심교육과 직업교육 범주를 구분하는 당시의 큰 틀 속에서 산업대학은 직업교육의 범주 속에 실업계고교와 전문대학을 연계시키는 계속교육 체제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산업대학이 출범된 초창기에는 설립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설치 · 운영 규정을 통해 대학 시설 및 설비 기준의 완화와 별도의 편입학 정원을 확보해 주었으며, 주말학습,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실습학기제 운영 등 다양한 학습 형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사회적 여건과 제도상의 장점으로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매력적인 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산업대학은 급변하는 산업화 사회에서 십 년 앞을 바라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의 모순으로 소용돌이가 많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전문대학들을 승격시켜 대학 설립이 용이하도록 한 것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양질의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창의적 심화교육 프로그램의 토대가 부족한 보수교육 학습 여건 하에서는 올바른 고등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산업대학의 재학생들에게 교육의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없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가능하면 빨리 치유하여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실은 개선될 수 있고, 교육의 수월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산업대학의 현황과 체제 개편의 필요성

산업대학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학 기회 확대, 직장인의 재교육, 직장 근로자의 대학교육 기회 부여, 전문대 졸업생의 편입 기회 확대 등을 배경으로 설립되었다. 주간 중심의 일반전형은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인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고, 야간 중심의 특별전형에서는 산업체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산업체 위탁자, 실업계 고교 출신자, 인문고 직업과정 이수자들에게 입학이 수월한 특별한 기회를 열어 주고 있다. 또한 학년제에서 학점제로 등록 방법을 변경하였고, 수업 연한을 폐지하였으며, 수업 형태의 융통성과 수학 편의성 등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전형을 확대하여 산학협력업체 근로자, 기술 자격자, 경력자, 실업계 출신 졸업생들에게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대학은 고등교육법과 대학설치령 및 설립운영규정 등에서 대학 및 교육대학과는 분리하여, 출범 당시에는 '개방대학'으로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해 오다가 1996년 이후에는 '산업대학'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계 규정이 보완된 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초창기에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상의 장점으로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였지만, 산업이 고도화되고 시대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본래의 교육 목적과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가면서 최근에 와서는 전반적인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현재 산업대학은 지난 20년 동안 전국에 국립 8개교, 사립 11개교 등 총 19개 대학이 설립되어 약 18만 6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4,500여 명의 교원이 재직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팽창과 성장이 거듭되면서 산업대학도 과잉 팽창되었고, IMF 경제 위기 이후에는 지방대학의 경우 입학생 자원마저 부족하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산업대학은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학력과 간판을 선호하는 풍조와 정책 당국의 지원책 미비, 법적·제도적 차등화 등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무한경쟁의 틀 속에서 존립을 위한 자구책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입학 대상 자원의 부족, 학위 취득 기회의 다변화,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의 시행으로 지방 소재 대학의 존폐 위기가 도래되었고, 산업대학의 고유 기능이었던 편입제도, 위탁제도, 평생교육, 특별전형제도 등을 일반 대학이 공유함에 따라 산업대학 교육의 독자적인 영역 상실을 보완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교육제도와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산업대학은 연구기능의 제약성, 교수 확보율 저조로 인한 교육 기능의 약화, 기구 조직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교육제정이나 교육시설 등도 아주 열악한 실정이다.

사회경제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대학교육의 대중화, 평생교육의 요구 등으로 산업대학도 과거와 같이 획일화된 제도로서는

"

사회경제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대학교육의 대중화,
평생교육의 요구 등으로 산업대학도 과거와 같이 획일화된 제도로서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고등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 방향에 따라
산업대학도 각 대학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일반 대학과 차별 없는 대학의 특성화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적 발전이 필요하다.

"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고등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 방향에 따라 산업대학도 각 대학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일반 대학과 차별 없는 대학의 특성화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적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Ⅲ. 외국 기술대학 제도의 고찰 및 시사점

미국의 Polytechnic University는 우리나라 산업대학에 비교될 수 있는 유형의 교육체제이며, 일반 University와 법적 구분이나 제약 없이 특성화된 교육목표를 지향하는 데에서 구분되며, 오히려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산학연계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RPI)는 그 위상이 미국내 10위권의 입지를 자랑하는 공과대학이다.

우리나라 산업대학의 본보기가 되었던 영국은 1992년에 "Future & Higher Education Act" 법령을 통하여 이원화된 고등교육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단일체제(a single framework)로 일원화하는 입법조치를 단행하였다. 이 법령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University와 Polytechnic 사이의 법적 차별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 대학의 종류를 종합대학, 통합대학, 교육대학, 신학대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대학은 독일의 통합대학에 비교될 수 있으나, 통합대학은 별도의 법 규정을 두는 등의 법적 구분은 하지 않고 단일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단일의 교육법상 동일 학위가 수여되는 대학(종합대학, 기술과학대학, 공업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은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단지 2년제 단기대학의 경우에만 대학의 장 속에 포함시키되 조항만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 유형별로 별도의 목적과 기능을 분리하여 명시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외국의 기술대학들은 기존의 일반 대학과는 분명히 궤를 달리하는 독자적인 교육 목적과 영역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학생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형태이건 확실한 수학능력평가에 의해 대학 진학이 결정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무조건적으로 산업대학에의 입학 보장을 요구하는 주장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의 여러 유형의 대학들에서는 고유한 산학협동 프로그램과 성인교육 내지는 추수교육 프로그램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질적 학습 배경자들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 운

영 등 고객중심 교육으로 학습사회화를 구현하려는 정책들이 많다.

Ⅳ. 산업대학의 현안 문제점과 지원 과제

우리나라 산업대학은 각종 법적 · 제도적 차별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저급한 대학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언론을 통해서도 산업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부각되지 못함으로써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산업대학은 고등교육법의 제정으로 입학 자격, 수업 형태, 학사제도 등의 대학 특성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일반 대학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일반 대학에서도 학점은행제 적용, 원격교육 시행 및 열린학습사회 구현을 표방하고 있어 산업대학의 교육 목적이 희석되었으며, 법적 · 재정적으로 자체적 발전 노력의 기회가 제약되어 있는 탓에 경쟁력이 약해진 상태에 있다.

산업대학은 1982년 설립 당시부터 1996년 "대학설립 운영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대학 시설 · 설비가 일반 대학에 비해 취약하여 사회적 인식이 악화되어 왔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 및 외부의 지원 등이 모두 일반 대학에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현재 산업대학은 같은 4년제 대학으로서 "대학설립 운영규정"이 요구하는 시설 · 설비 기준도 같고, 학생의 성격이나 교육의 내용도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학에 비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법적 차별성은 교수 정원, 대학 행정조직과 인력, 대학원 설립 운영, 학생 모집의 자율화, ROTC 제도, 교직과정 설치운영 등, 대학 입학 지원자의 중요한 대학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산업대학들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1996년 이후 산업대학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시설 · 설비 등을 갖추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은 법적 구분에 의한 일반 대학의 아류 취급을 받는 등 아직도 부정적 시각이 주류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등한 여건을 조성하여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해 주어야 한다. 산업대학도 일반 대학과 동등한 여건을 조성하여 산업대학에 공정한 대학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신 엄격한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취지에 맞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대학 존립을 위한 대학의 특성화 방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체 계속교육의 다양화와 심화교육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급속한 산업구조조정 시대에 소요되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보수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전문지식을 심화교육 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과 위상이 필요하며, 국가적 공헌도에 따라 특별한 지원과 교육 여건 확충 예산지원도 필요하다.

고등교육법상의 산업대학 목적에 명시된 산업대학의 고유 특성은 사실상 일반 대학과 공유되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산업대학과 일반 대학과의 법적 구분을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대학도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원의 설치를 허용하여 산업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종합대학의 기능을 갖는 4년제 산업대학에 대해서는 학교 형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생 정원 또는

"

현재 산업대학은 같은 4년제 대학으로서
"대학설립 운영규정"이 요구하는 시설 · 설비 기준도 같고,
학생의 성격이나 교육의 내용도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학에 비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법적 차별성은 대학 입학 지원자의 중요한 대학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산업대학들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

학과 수에 따라 행정조직의 편제를 자율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산업대학도 일반 대학과 같이 특별전형에 대한 사항을 학교의 자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산업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대학에 대한 교사시설 및 교원 수, 사무직원 수를 일반 대학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교육시설을 예로 들면 직장인들에 대한 교육은 주로 야간반에서 이루어지는 산업대의 특성상 똑같은 학급에 대해 주간보다 두배의 시설이 필요한 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 기준은 이를 간과하여 일률적으로 책정, 교실과 실험실습시설 등 교육시설의 만성적 구조적 부족에 처해 있다. 또 교수는 물론이거니와 대학교육 행정 조직과 인력도 주야간 운영, 입시제도의 복잡성(일반전형, 특별전형, 편입학), 학점제 등록 등으로 인해 일반 대학보다 몇 배나 많은 행정수요에 처해 있으나 교수, 행정조직, 행정 정원은 일반 대학의 반에 불과하다. 일반 대학과의 차별에 따른 산업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산업대학에 대한 특별전형의 범위와 우선 순위의 강제화를 풀어 주어야 한다. 산업대학만이 이러한 특별전형의 우선 순위를 강제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산업대학의 고유한 기능이 사라진 현실에서 불필요한 규정이다. 특히 산업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주간의 경우는 모든 학부가 일률적으로 20%, 야간의 경우는 50%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고시)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산업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산업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여야 한다.

Ⅴ. 맺음말

산업대학은 평생교육시대의 관점에서 정체성 확보, 산업체 경력자의 학습 이력에 적합한 교육체제의 구현, 졸업 후 산업현장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현장 실천력 및 적응력이 강한 인재의 양성 요구로 인하여 산업대학의 체제개편은 불가피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대학의 체제개편을 위해서는 우선 각 대학의 장점과 특성에 따른 선택적 발전을 허용하여야

"

시장에서의 생존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들이
공정경쟁에 의하여 자구책을 마련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공정한 경쟁 여건과 환경조성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산업대학의 궁극적인 발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자율운영과 책임경영의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다. 고등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 방향에 따라 산업대학도 각 대학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서 일반 대학과 차별 없는 여건을 가지고 특성화 방향으로 선택적 발전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정경쟁의 여건 및 환경 조성이 촉진되어야 한다. 시장에서의 생존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들이 공정경쟁에 의하여 자구책을 마련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공정한 경쟁 여건과 환경조성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산업대학의 궁극적인 발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자율운영과 책임경영의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산업대학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에서는 현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의 제 2호 및 제 2절 '대학 및 산업대학'을 개정하여, 산업대학 구분을 삭제할 것을 건의한다. 한편 산업대학의 역할을 구분하여 교육목적에 따른 대학 특성화 정책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고등교육법 제 2조(학교의 종류)에서 별도로 '평생교육 특성화대학' 구분을 추가 신설하여 규제가 아닌 장려정책으로 산업대학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진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처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한양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건설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안동대 총장,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서울산업대 총장으로 재직중이며, 전국산업대학교 총장협의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 제조업의 산업구조와 국제무역에 관한 실증적 연구" 등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